

2019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2018. 1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목 차

1. 총괄의견 및 분야별 의견 요지	2
2. 도시안전 · 교통 · 주택 분야	6
3. 문화 · 관광체육 분야	17
4. 환경 · 공원 분야	23
5. 경제 · 일자리 분야	37
6. 복지 · 여성 분야	48

1

총괄의견 및 분야별 의견 요지

I

총괄의견

- 민선 7기 서울시정에 대해 기존의 혁신정책들이 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실제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시행되는 즉흥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가 공존함
 - 참여예산을 비롯하여 여성과 복지, 청년과 일자리 사업 등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의 제도적 안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 정책의 수요자 관점에서 재평가를 통한 개선과정이 필요함
- 특히 도시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부서별 단절적인 집행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대표적으로 교육정책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부서와 문화부서와의 협력 과정이 요구되나 이런 복합성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구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정책사업이 좀 더 정책의 당사자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맞춰 평가하는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 각종 도로 등 SOC 건설 사업에 대해 기존의 제도화된 의견수렴 절차를 넘어서는 새로운 갈등관리를 위한 공론장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 기후변화나 청년/여성 등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신규 정책의 발굴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변화이며 또한 서울의 신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점은 서울시가 능동적인 경제정책의 주체임을 보여주는 변화로 긍정적임
- 유사한 성격의 사업 또는 연계 가능한 사업을 사업 부처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협력 추진하여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도시안전 · 교통 · 주택 분야

-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측면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대규모 SOC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드러남
 - 소방방재본부의 안전교육 강화, 소방관의 사용장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점, 도시계획국의 캠퍼스타운 추진과정에서 대학법인 주체 외에도 주민들과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추진 절차가 마련된 점은 서울시가 주요하게 성과가 보이는 사항은 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시한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대규모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서울시가 공급자 중심의 사업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보여줌
 -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움

문화 · 관광체육 분야

- 기존의 정량적, 개별사업 중심의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 창작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꾸고 지역과 일상의 삶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 관광 및 체육 정책의 경우 여전히 정량적 성과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띄는 한계가 있지만, 관광의 경우 주민의 일상적 삶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성, 무장애 관광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관광향유권을 고민하는 정책들이 등장. 체육의 엘리트체육과 폐쇄적 클럽 중심에서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이런 정책적 변화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주체들을 육성하고 지역주민 생태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의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환경 · 공원 분야

- 기후변화에 호응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상호 연계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관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나 서울시 태양광 지원 사업 등은 사업의 긍정적인 방향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후의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음으로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지나치게 태양광에너지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간헐적으로 편성된 일부 공원 사업 외에 다른 해제 대상공원들은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의 공개가 필요함
 - 시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원의 지정 혹은 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서 ‘어떤 공원부지가 남게 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점차 존치/비존치 대상 공원의 선정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아짐

경제 · 일자리 분야

- 2019 회계연도는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첫해라는 시의성에 맞게 경제 · 일자리 분야 정책과 예산 수립이 요구됨
 - 민선 5~6기 서울시정은 복지재정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6기 시정을 펼친 결과 2012~2017년 사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고용된 임시직에 대한 직접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2012년~2013년 직접고용 기간제 1,369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2017년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5,927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7,29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도의 경우 353,956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펼쳤음
- 다만 2018년 예산 편성에 비춰 볼 때, 경제진흥본부와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정책과 예산 편성은 전년도의 정책과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일자리분야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함

복지 · 여성 분야

- **복지정책 및 복지시설 관련 예산과정에서 좀 더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이 필요하며 복합적인 수요자의 상황을 고려해 사업 집행 역시 다양한 사업부서간 협업 구조를 바탕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정책 예산을 인구 구성별, 인권 문제별 등으로 볼 수 있게 하여서 부서 협력, 정책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책 생산·개선되는 것이 필요함.
- 또, 전체 정책대상 인원수 대비 예산에 따른 정책대상 인원수를 밝히는 예산서가 필요함. 미래세대(영유아, 아동, 청소년)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정책 대상 기준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서간 정책 협력이 필요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가정 양립에서 성평등 중심의 일·생활 균형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생산 및 보완이 되어야 함
- 성과지표는 예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이 같은 수치를 적용함에 따라 필요정책의 확대, 개선,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개선이 필요함

2

도시안전 · 교통 · 주택 분야

1

총 평

- 올해부터 상반기 부서 예산편성 시기부터 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온예산 과정이 도입되었으며, 참여예산을 통한 시민들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가 실질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음
 - 주요하게 △ SOC 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 신규사업 편성이 필요하다 △ 또한 SOC 사업의 투자 판단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절차가 있어야 하고 △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특히 도시교통안전에 있어 교통약자를 고려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서울시 각 사업부서는 7월 25일, 26일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상반기 의견서에 대한 반영여부를 확인하였으나 △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집이 있는데도 활용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의 개선 △ 공공주택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이상, 주택건축국)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되었으나 △ 유가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광나루역 환승주차장>의 입지 부적정 문제(이상, 도시교통본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공개 시스템 마련(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음
-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측면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대규모 SOC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드러남
 - 소방방재본부의 안전교육 강화, 소방관의 사용장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점, 도시계획국의 캠퍼스타운 추진과정에서 대학법인 주체 외에도 주민들과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추진 절차가 마련된 점은 서울시가 주요하게 성과가 보이는 사항은 참여예산을 통해서 제시한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대규모 SOC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서울시가 공급자 중심의 사업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보여줌
-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움

II 주요사업별 의견

주택건축국

저소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부재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임대공급활성화, 사회주택공급, 공동체주택활성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모두 시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최대 80%까지의 부담이 부과되나 이 조차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자를 위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크게 늘지 않음
 -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이 민간 조합의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발생하는 임대아파트에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근 재개발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연동하여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역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최근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시세 기준 80%라는 서울시의 기준조차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어 이들을 위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역시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시세 기준 8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안) '공공임대주택 종합포털' 구축

- 서울시는 SH공사, 공동체 주택,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임대주택의 공급현황과 입주신청 등의 정보 들이 모두 사업자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어 꼭 필요한 사람이 정보를 얻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임대주택 현황 및 공급,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분기마다 한번씩 공고 혹은 발표하는 한편 별도의 임대주택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 서울시의 사업계획으로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역세권 지역보다 대학가 주변 저렴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청년 세대를 대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서울 하루 출퇴근 소요시간이 2시간이 넘는 현실에서, 직장을 가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공급대상에 대학생 외에 청년 직장인도 포함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 기존의 정비사업보다 원주민의 재정착 및 폐기물 발생 등에서 유리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긍정적이나 좀 더 적극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3발 자전거 보급 △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충전시설 확충 △ 지역별 자전거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 등의 세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3발 자전거 보급: 자전거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유아나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따릉이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들을 위한 3발 자전거를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공공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전기자전거 보급 및 충전시설 마련: 고개나 언덕이 있는 지형에서는 전기자전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공급계획이 확인되나, 정작 전기자전거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것은 모순임

- 지역별 자전거 환경 실태조사: 현재 조성된 자전거 도로가 대부분 갓길 주차하는 차량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길도 중간 중간에 끊겨서 오히려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큼. 서울시는 한강대로 등에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작 생활권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 보행길 종합정비(사업조정)

-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동사업은 최초로 서울시 보행로를 조사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목적은 ‘대표 보행길’ 조성에 두고 있고 일상적인 보행로를 보행친화적으로 관리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거리가 있음
 -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는 시민들은 집 주변의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지장물의 설치 등으로 보행에 침해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의 대표보행로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과 상관없이 보여주기식 혹은 관광 목적의 사업으로 여겨짐
 - 보행중심도시가 일상적인 보행환경의 개선 없이 대표 보행로 조성 같은 사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오히려 통학로 등 지역의 주요한 보행로를 중심으로 보행 중심의 도로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임
 - 또한 좁은 길의 쌍방 통행 등으로 보행 환경이 침해되는 갓길 등 주거지 내 주변도로의 체계를 일방통행이나 차량 진입 금지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나 이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비협조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일(마을공동체 사업시 시간대별 차량 통제 등이 제안되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음)이 비일비재함
- 시간별 통행제한 도로,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 구조 마련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남현공원, 동명근린공원,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전액 삭감)

- 공원은 다중이용시설이고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약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인데 공원에 주차장을 짓게 되면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접근하는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각 사업들은 이미 2016년부터 검토되었던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발(관악 남현, 강동 고덕 등)이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인데 이를 기습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원 내 지하주차장은 사실 기존의 공원 접근로를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갈등이 불거진 가능성이 큼으로 2019년 예산에서는 삭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사업

민자 경전철사업 추진

- 박원순 시장의 경전철 4개 노선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 발표 이후에도 예산서 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며, 기 투자 노선인 신림선의 경우에는 사업 재구조화가 착공하지 않은 면목선에 대해선 사업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함
-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이미 건설된 우이-신설경전철의 운영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경전철이 인근 지역의 주민 교통권 보장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신규 경전철 사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임

- 공개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는 한편, 경전철 운영상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보공개 체계가 갖춰질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업

□ 정비사업 사업비용 보조

-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70%에 대한 사용비용을 보존하는 것은 당초 정비사업이 민간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과정에 비춰볼 때 과도함으로, 사업 규모와 연동하여 작은 지역은 70%를 사업 규모가 큰 지역은 50%를 지원하는 등 차등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을 인가 받은 사업주체가 장기간 사업표류, 또는 인가, 취소된 경우에 기존의 조합운영비 사용 지출에 대하여 조합총회에서 의결 시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판례)임.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소위 매몰비용이라 하여 세금으로 조합운영 사용비에 70%를 지원해 주고 있음
 - 그러나 부득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지역의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여 부동산거래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이를 서울시가 사업시행을 허가도 해주고, 또 취소도 하며 사업운용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과도한 지원이라고 볼 여지가 큼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 여전히 광장 조성과정에서 전체 서울시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형식적인 주민참여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물리적 형태 뿐만 아니라 이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이 더욱 중요한대도 광장을 물리적 환경 중심으로만 접근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함
 - 실제로 현행 열린광장시민운영위원회 등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호하고 광장의 사용에 있어서도 행정과 시민들의 사용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장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따라서 물리적 환경 만 새로운 광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운영과 사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기왕이면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아예 민간단체에게 광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는 등, 기존의 시설유지관리 위주의 위탁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방치된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지역마다 복잡한 소유권의 문제로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자치구가 개입하기 복잡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슬럼화되고 있음. 이에 대해 25개 자치구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방치된 건물에 대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작구의 특정 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에는 상당 기간 동안 사용없이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 소유권 분쟁 탓에 계속 슬럼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지 확인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

빛 공해 방지사업과 야간경관 개발 사업의 상충 해소

- 서울 도성 들레길과 같이 중점적으로 야간경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경우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조명환경 구역에 근거하여 일반 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지정된 곳과 떨어진 곳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야간조명으로 활용하는 LED 램프의 경우에는 수십 Km까지 빛의 눈부심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미관지구나 일반거주지역으로 분류되는 곳과 인접해 야간 조명이 사용되는 데는 제한이 필요함

도시계획시설 매입

-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므로 내년부터는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이때부터 잇따라 해제됨. 정책사업만 치중하여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유형별(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녹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학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부지는 토지 등을 보상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장기 민원도 해소하여야 하므로, 내년에 매수 보상 예산이 반드시 마련되어 집행 될 수 있어야 함
- 예)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종로지역 도시공원은 모두 6곳
- 종로구 삼청근린공원 (서울시가 1940년 도시계획공원 1호로 지정, 매입 진행안됨) 등

안전총괄본부 소관 사업

□ 서울제물포지하도로 민자사업

- 제물포지하도로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SOC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안전총괄본부에서 별도의 사전 절차나 과정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임
 - 제물포터널공사는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공사계획시 사전검토 항목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 결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발생,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인근주택과 학교주변에 환기구 설치문제, 공기정화시설, 소음,진동, 화재시 대책 및 배연구 설치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도 상부도로 축소로 인한 녹지 환경조성을 두고, 주민들과 시와의 상업지역, 녹지 환경조성의 용도변경 갈등, 선유고가도로 철거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시민 제출 법개정 의견]

이 터널공사를 초기에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계획의 사전검토 항목(14)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도 않았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인 주택과 학교주변에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가, 학교시설 주변에 환기구설치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에 부딪혀(기존의 환기구 설치[신월동,목동,양평동,여의도 4곳] 백지화) 공기정화방식을 바이패스방식[배기가스를 터널 내부에서 정화, 구조가 집중형인지 분리형인지 검증별개]으로 변경함. ▶공사 발파시 인근아파트 주택에 진동, 소음, 분진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특히 서부간선도로가 중첩되는 거성아파트 뒷편이 발파예정지로 민원이 많고, 분진의 경우 이동식 집진기 대신 분무기를 설치한 제물포터널에서 배출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터널안에서 화재 발생시(소방청통계 10년간 화재발생 275건, 서울시 1년에 1건 정도 발생빈도) 대책으로 배연구 굴뚝설치, 높이문제, ▶집중호우(폭우)시 침수 및 누수 가능성(예,김포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내 북향터널 침수사고) 대비대책, ▶상부도로에 녹지환경조성(공사진행후 지상녹지조성주민반영여부) 등 공사를 진행함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따라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사전 ‘지역주민영향조사’를 진행하여 사전에 갈등요소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갈등 사항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이 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정보를 가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신뢰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런 사항에 대한 사회갈등 관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전문성도 낮다는 것이 확인됨
- SOC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결정되면 불가피하게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특정한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불안정한 행정과정에 의한 행정불신이 지속될 것이므로 변화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 서울시의 자체적인 갈등 관리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규 SOC투자 결정과정에 시민참여 도입 필요

- 신설되거나 확장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해 막상 SOC사업이 준공되고 사용될 때 해당 사업이 관련 목적을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SOC 투자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그 재정부담을 함께 지는 서울시민들이 타당성과 이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소방방재본부 소관 사업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 연 1회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제 도입

- 서울교육청은 교육안전관리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7대 안전과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대상의 교육이라 하더라도 신청학교에 한정하고 있음
-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의 안전의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선 학교로 보급하는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소방도로 내 주차 등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을 통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 건물의 '가짜 방화문' 설치여부 확인 조사 추진

- 지난 1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밀양의 요양병원 화재 당시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가짜 방화문은 시공시에 자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함
-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화문의 경우에는 화재시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짜 방화문에 대한 검사도 소방시설 점검시에 주되게 반영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III 기타 의견

□ 제연장치 기준을 강화하는 소방시설 설치규정 개선

- 화재발생 시 화염보다는 유독가스에 대한 피해가 6~80%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면적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상태임.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화염물의 양, 수용인원, 화재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연설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현행 규정 상 일반시설 제연설비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는 요양병원에 한해서만 스프링클러 규정이 의무화되었으나 여타 다중시설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빠진 밀양 세종병원은 제연 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빠져나갔다. 제연 설비는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대피와 함께 화재 진압을 돕는 시설이다. 연기감지기, 송풍기, 제연경계벽 등이 해당된다.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층의 바닥 면적이 약 394.78㎡(1층 기준), 연면적 1489.32㎡인 세종병원은 제연 설비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욱이 제연 설비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보다 훨씬 느슨하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이나 11층 이상인 의료기관, 또는 4층 이상 높이에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의료기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화재 제연설비 기준 강화해야 유독가스 질식사 막는다”(한겨레 2018. 1. 29.)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9759.html#csidx3a40f23f834e4488c1a0302bf237109

□ 공공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절차 마련

-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시에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곧바로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추진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모호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리모델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택공급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 수평증축시에 기존의 1가구 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그만큼 주택공급이 용이하게 됨

[시민 제출 법개정 의견]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해산시기를 관련규약에서 사용검사를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을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해산결의 후 총회 회의록, 정산서류 등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조합해산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1년내에 정산되어 해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 경우의 해산시 제출하는 정산서의 시점과 성격이 모호하고, 조합측과 조합원간에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여 유권해석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때의 정산서는 리모델링사업의 실질적인 전체 사업의 마무리 정산서가 아니라, “조합해산을 결의할 당시의 정산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법적, 제도적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3

문화 · 관광체육 분야

I

총 평

- 박물관, 공연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립비와 같은 SOC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
 - 2019년 예산에도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인프라(서울공예박물관, 시민생활사박물관, 돈화문민요박물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 대폭 확충. 그에 반해 공간운영과 관련한 콘텐츠와 인력에 대한 예산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구조를 보여줌

-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지원 정책의 부재
 -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원 사업들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음. 단발적인 창작지원이나 불안정한 일자리 사업이 아닌 예술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전략과 사업이 필요함. 예술인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문화유산 정책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일상과 괴리되는 문제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되는 한계
 - 문화유산 유지, 관리, 보수에 집중되는 문화유산 정책의 경향은 여전히 보임. 시민들의 참여, 개입을 통한 문화유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양적인 성과중심의 관광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관광 활성화(세부 사업내용 확인 불가)를 통한 일상과 관광이 상생하는 정책적 접근의 시도는 긍정적 평가, 장애인·비정규직 등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보편적 관광향유권 보장도 긍정적. 다만, 현행 정책이 실제 관광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시민중심, 지역과 일상의 삶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관광 및 체육 정책의 경우 여전히 정량적 성과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띄는 한계가 있지만, 관광의 경우 주민의 일상적 삶과 공존할 수 있는 방향성, 무장애 관광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관광향유권을 고민하는 정책들이 등장, 체육의 엘리트체육과 폐쇄적 클럽 중심에서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이런 정책적 변화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 주체들을 육성하고 지역주민 생태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존의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적극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콘텐츠 중심 및 인적 육성 중심의 정책의 부실
 - 공간과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과 이를 위한 인력 운용 계획이 없는 공간과 시설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에 반해 콘텐츠 및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 계획은 부재하거나 부실함

II 주요사업별 의견

문화본부 소관 사업

□ 풍납토성 복원

-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공간으로서 풍납토성 복원 필요
 - 풍납토성 부지 매입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오랫동안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미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안 구상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을 유도하는 방향의 과정도입 필요. 전문가 중심의 계획 설계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한 방식을 반복한다면 풍납토성 역시 시민들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 그룹들이 참여하는 (가칭)풍납토성공간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실험모델로서 풍납토성 공간정비를 추진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

○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활용 방안 검토

- 지리적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 기반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으나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려움. 현실적으로 시민문화향유 기능의 역할이 어렵다면 창작과 연구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기능전환도 고려해야 함
- 향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함

□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 시민생활사박물관의 컨셉과 목적이 불명확함. 시민들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한 시민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 서울생활사(1960~80년대) 자료, 서울동북부 지역사 자료, 구 북부법원 및 구치감 자료 등을 전시하는 시민생활사박물관의 컨셉은 모호한 측면이 있음. 서울시민의 생활사를 다루는 공간인지, 서울동북지역과 구 북부법원 및 구치감이라는 장소성을 다루는 공간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음
- 박물관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지금과 같은 진행방식이면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애매한 공간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시민생활사’라는 주제에 맞게 전통적인 전시관 형식이나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서울의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일상성과 현재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생활문화사업과 교류를 통한 콘텐츠 개발, 시민이 콘텐츠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 서울관광재단

○ 시민의 일상과 공존할 수 있는 관광정책 전문기구로

- 올해 5월 서울시의 관광전담기구인 ‘서울관광마케팅(주)’가 해산하고 ‘서울관광진흥재단’이 새로 출범함으로써 수익성과 성과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주식회사에서 재단으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
- 그 동안 서울시의 관광정책이 관광객수로 대표되는 성과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에서 질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함. 지역주민의 일상과 상생할 수 있고, 인권·환경·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보호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의 서울시 관광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조직이 아닌 서울시의 대안적인 관광정책 전문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리서치를 통한 씽크탱크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서울관광재단의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

○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향유권 확보

-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여행활동을 종합 지원 등의 사업은 양적성장 중심에서 질적성장을 중시하는 관광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다만, 관광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민과 관리가 필요함. 실제 관광지에서 시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음. 운영과 관리 비용에 좀 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

○ 지역주민이 마을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을관광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발굴되고 성장되어야 함. 이를 위한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 네트워크 및 동아리 모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민이 마을관광 상품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술가, 디자이너, 관광산업 전문가들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과정도 필요함

서울형 체크바캉스 (노동약자 휴가지원사업)

○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 필요

- 전년도 정부에서 시행한 체크바캉스 사업을 보면 신청자가 몰리면서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줌
- 사회적 약자(노동약자)들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측면은 긍정적 평가를 할만함.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대상자가 한정된다는 점에서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적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 생활체육의 현장과 소통하는 직장운동경기부

- 서울시청 및 자치구의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체육의 현장과는 유리된 채 매달 중심의 성과를 내기 위한 역할만 수행
- 단순히 전문스포츠인의 일자리 제공 및 국위선양 및 지자체 홍보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체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생활체육과 연장선상에 리딩그룹으로서의 역할 전환
- 비대회 기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에 방문하고, 초청강연을 통한 시민들과 접점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건립

○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확대

- 생활체육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생활체육 환경이자 자원이 될 수 있으나 학교행정과의 소통 부재, 폐쇄적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움
- 지역 생활체육 주체들의 자발적 관리 운영을 통해서 방과후 시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

□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 폐쇄적 클럽중심의 뛰어넘는 대안으로서 생활체육 모델

- 생활체육의 주를 이루고 있는 클럽중심의 생활체육 생태계는 폐쇄적인 회원구조 방식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규진입이 어렵고, 가벼운 수준의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민리그는 클럽중심의 생활체육 생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서 긍정적 평가. 좀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종목들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운영

○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보장

-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대회의 위상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줌.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

III 기타 의견

지역의 문화공간의 시민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접근경로 마련

- 지역 유휴 문화공간 및 시설에 대한 리서치를 통한 지역문화시설 맵핑
- 지역 문화공간 및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정보 플랫폼 구축
- 문화공간 및 시설들의 사용에 대한 문의 및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임

4

환경 · 공원 분야

I

총 평

- 기후환경본부의 프랜차이즈 고효율 LED간판 교체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전개방안에 대해 본 분과 위원의 지적을 통해 해당사업의 예산을 민관 협력사업으로 전환 함으로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절감함
 -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시의 대기오염 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여러 지속사업 및 신규 사업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가시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한 홍보가 부족하고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을 사고 있음
 - 따라서, 단순 알리기 식의 홍보가 아닌,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수 있게 자세한 설명을 동반하는 홍보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공개 도시배경 측정소 측정 정보 및 우수 실내 공기질을 보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치 공개,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과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사후 점검 등을 제언함
- 지역별(실제 공원별 또는 가로수 식수지(동 또는 구) 등)로 집행된 예산의 상세한 설명과 통일된 항목으로 정리된 예산 안내서 필요
 - 각 공원별 통일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동일 항목으로 운영된 이름들이 많아서 중복된 예산 낭비로 오인할 소지가 높으며, 지역별 형평성과 예산 이동 추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 또한 장기사업의 목적과 연도별 로드맵이 예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재 수준의 목적 달성도와 최종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 실제 가로수가 식수된 지역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과 유지 관리 등의 성과지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예산 집행 형평성과 예산 낭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기후환경본부

태양광 에너지 시민협력 사업 활성화 및 대기환경 개선 사업 예산 증강필요

에코 마일리지제 운영 및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시민사업

- 매년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에너지의 절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일자리 창출로 인해 시민이 협력하는 서울시 에너지 시티 모델 확립 가능
- 또한 현재 에코마일리지 가입방식이 까다로워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좀더 용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시스템 설계로 부실화 사전방지 및 중장기 미래 대비

- 가연성 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가운데 불에 타는 재료를 말하며, 이를 소각하는 과정을 통해 매립에 필요한 공간을 절약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전기 발전 및 난방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등 부족한 자원과 넘쳐나는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공해가 문제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미루어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홍보부족과 적절한 관리의 미흡 등으로 공해유발시설로 오인케 한 몇몇 사례들로 인해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의 대상이 되고있는 안타까운 현실임

*사례 : 세곡동의 강남 폐기물 선별 사업장에서는 소각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선별시설이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그러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 현실상황에 부합한 운영예산을 배정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프랜차이즈 고효율 LED간판 교체지원사업

-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 간판 교체지원은 타당하나 사업추진 방식의 합리성과 효율성 강화 필요

- 프랜차이즈 위주의 자본이 뒷받침된 사업체는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의 수익구조를 볼 때 본사의 수익사업이 창업시 인테리어와 간판이 주요 수익원의 하나로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교체비용을 지원할 경우 본사의 수익만 올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의 경우 이미 LED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으며, 일부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하여도 가맹점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개별 소상공인의 예정에 없던 비용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함이 타당함
 -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동네 골목상권의 영세영업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프랜차이즈보다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건물 및 지역별로 LED 간판 교체 전액 지원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LED 간판 교체지원은 합리적 에너지 활용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서울시,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의 비율이 60%/20%/20%를 제안하였으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특정 프랜차이즈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재고되어야 함
 - 당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LED 간판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자금 지원시 LED 간판 교체 지원 사업 예산에서 간판 제작비용을 패키지로 포함하여 창업 소상공인부터 지원을 해 주면 바람직할 것임.
 - 부득이 프랜차이즈 연합회 등의 단체와 업무협약을 할 때 이를 감안하여 정확한 표준을 확정하고 소요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또는 간판 제작업자 등의 비용 과다산출 등에 의한 비용 누수를 예방하여야 함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관련 사업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성 재고 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태양광발전은 발전의 주된 연료인 화석에너지 부족으로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전기생산 가격이 높아 시민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극 보급되어야 하는 사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 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사업 중 유독 태양광발전에만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태양광 관련 사업 시공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 과거 태양광 보급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위주의 옥상형 설비 위주였다면 현재는 아파트 개별세대 위주의 베란다 거치형 설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설비 사업자들의 단체계약 요구(10가구 이상 등), 시공결과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사례 : 강서구 SH공사의 아파트 중 베란다 거치형으로 설치한 아파트들에서 바람이 세게 불 때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 등 주민들의 안전과 소음 문제 등에 대한 불만사례가 있었음

- 현재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등 유휴 공동공간이 아무런 활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법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등 단지 내 공동공간에 설치하는 것에 더 주력하고, 베란다 거치형은 충분한 설명과 함께 병행하여 설치하여 혹서기 등에 전기요금 절약효과를 극대화함
- 기 설치된 단지에서는 점검을 통한 내구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정사업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서울시 태양광 관련 사업 형평성 재고 및 시민참여 확대 필요

- 지원금 신청과정에 있어 사전예약제, 개별가구 선설치 후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개가 필요함. 실제로 환경 모임 등 환경에 관심이 많고 태양광 설치를 절실히 원하는 시민들의 경우 설비 사업자들의 단체계약 요구(10가구 이상 등)나 해당 구의 선착순 신청 순서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음
- 단체 설치가 설치비 절감의 효과는 있겠으나 충분한 이해가 없는 일반 시민 대상 설치보다는 환경 모임 등과 협업하여 공동 설치를 하는 것이 관리 및 사업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 다중이용시설은 서울 시민의 소중한 삶의 공간, 정보 공유와 관리 강화 필요

-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 공간에서 보내므로 실외 공기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시점검 내용, 우수 기관 등의 상세한 명단을 언론 홍보, 관련 시민단체에 명단 제공 등을 통하여 좋은 곳은 더 홍보하고 좋지 않은 곳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나타난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환경부에서 정한 유지 기준 등을 간신히 충족시키는 시설은 우수시설이 아니며 지하철 역사 검사 결과처럼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없다면 우수시설의 기준이라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등급별로 명시해야 하며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는 진단 사업은 예산 낭비라고 사료됨
- 실내공기질 기준 미달 시설의 경우 관리자의 교육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진행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운영

-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인이 있는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여 잔재쓰레기 양을 줄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업임
 - 2018년 9월 발표된, 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에서도 사용된 일회용품의 수거·선별 시스템을 확충해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을 2022년까지 6,000개로 확대하기 하기로 발표함
 - 사업부서에서도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지속적인 설치수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8년 14억 원에서 2019년 13억 원으로 예산이 감소하였음

물순환안전국

□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조사정비사업, 노후 불량하구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 싱크홀과 태풍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시민사회에서 노후 하수관로 사업비 감소에 대한 우려를 온예산위원 의견 반영으로 예산 증액
 - 당초 사업비 감소로 하수관리사업의 불안 및 우려에 대해 방재예산을 투입함으로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된 사례임. 2018년도에도 여러개의 태풍의 영향으로 침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로부터 안전한 거버넌스 기반의 물순환 도시 조성에 투자가 필요
 - 하수관로 노후정도를 한 눈에 알수 있는 서울시 하수관로 연령지도(年齡地圖)와 매립지역 등 지질상태 그림을 만들어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함. 특히, 싱크홀 발생은 하수관로 노후 때문만은 아니고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스며들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사업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생각됨

- 도로함몰 예방은 땅속에서 흐르는 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또한 우선되어야 하고 도로함몰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빠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빗물마을

○ 해외사례(독일, 일본 등)를 통해 한국식 맞춤형 빗물사용 물순환 시스템 구축 요청

- OECD 회원국 중 한국도 물부족국가이며 그만큼 빗물 사용의 재활용이 필요함 (2009년 기상청은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빗물의 경제적 가치를 9,097억 원에 달하고, 장맛비는 약 2,470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분석함)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역으로 확대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마을 형태 뿐만 아니라 법정시설 및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화장실 및 소규모 댐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앙일보, 2018년 7월 8일, <에코노믹스 : 빗물 모으면 돈 된다 ...경제적 가치 1년에 6조 7,200억원>에 따르면, “댐에 저장된 용수는 현재 m^3 당 52.7원이며, 이를 적용하면 한 해 동안 내리는 빗물의 총량 $1,276m^3$ 은 약 6조 7,200억 원이며, 총 강수량의 27%를 차지하는 장마비만 따져도 1조 8,000억 원이 된다”고 밝히고 있음

※ <기사자료> 하늘이 내린 공짜 선물인 빗물의 경제적 가치 크다(경남일보, 2018,07,11)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생태적 동물사 및 전시환경 개선

○ 사후약방문식의 땀질처방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의 현실적 예산 증액 필요

- 해마다 반복되는 AI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예방대책과 연계된 동물사 조성사업이 되어야 할것이라 생각하며 가금맹금사가 현재 여론에서 서울대공원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 1위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동물 복지 환경과 상관없는 해양관 전시시설 비용을 줄이고 생태적 동물사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원래 계획한 안대로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사 마련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양관 리모델링의 경우 상당한 퀄리티의 4D 시설 등을 만들지 않으면 쓸모없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민들이 애용할만한 수준의 4D 시설을 만들려면 인건비 및 시설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용 부족 시 2D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임. 푸드코트 및 해양관 동물사 이외의 시설 리모델링은 당장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해양관 리모델링 비용을 전환하여 가금맹금사 리모델링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해양관 리모델링은 4D 설치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시기로 미룰 필요가 있음

□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서울대공원 전산화 사업**

○ **시설이용자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행사프로그램 개발 및 현실적 예산배정 필요**

- 당 사업은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그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특색이 없는 정형화된 고정행사에 치중한 예산집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반기, 하반기 축제행사의 경우 배정 예산이 각 210,000천원으로 경쟁대상에 있는 유사 민간기업의 그것에 비해 물적, 양적으로 떨어지는 수준의 행사로 전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현실적이고 일반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축제 및 행사를 기획/실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현실적 예산배정이 필요함
- 공원전산화 사업은 단순 감시용 시설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상시 온라인 관람과 MCN (Multi Channel Network) 방송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폰 App 등과 연계해서 재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을 증액하여 배당함을 제안함

푸른도시국

□ **서울도심 숲을 대상으로 한 시공원 관리 및 공원조성사업 시에 고령사회에 부합한 자연친화적인 숲 실버 여가공간(FSLZ : Forest Silver Leisure Zone) 특화조성 필요**

-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2017년 14,2%)으로 도시노인층의 숲과 공원을 이용한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인친화적인 공간과 시설이 요구 시 됨**
 - 공원녹지정책과(시공원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는 현재의 일반인 공용시설(체육시설, 산책길, 휴식시설)과 부분적으로 유아숲, 태교숲 등이 설치되고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시공원에서 국가적인 노령사회에 맞는 노인여가, 건강관리시설을 자치구 보건소와 노인복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원에 추가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공원녹지정책과(동네뒷산 공원조성)은 신규공원 조성 시에는 숲이 주는 건강과 행복요소를 노인연령층에게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 설치하는 방안이 요구 시 됨
- 특히, 한국의 고령사회에서 도심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동네뒷산 공원조성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공원조성 시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사전개발하고 공간배치와 시설물설치를 연계하여 노인층의 삶의 질 개선과 제2인생을 즐기는 행복한 숲으로 노령사회 도심공원조성의 시대적 관점전환이 필요함

※ 숲의 건강, 행복요소 (출처 :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 2007년, 신원섭)

□ 서울 식물원 운영 관리 및 식물 문화 조성

○ 토지보상 사업 및 박람회 사업은 온예산위원 의견 반영됨

- 기존의 식물원과의 차별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대한 예산이 미흡하고, 식물과의 친화력이 중요한 시기인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
- 전시회나 국제 네트워크, 식물 자문단 구성을 위한 예산 사용 후 시민들의 만족도나 평가에 따라 예산 비율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온라인 홍보 대비 오프라인 홍보의 효율성을 판단한 후 예산 감액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동네뒷산 공원조성, 암사역사공원: 2020년 도시공원일몰에 따른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동네뒷산 공원조성’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동네와 접한 지역이 토지주의 관리 소홀, 무단경작, 쓰레기투기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하여 숲 복원, 휴게 및 유희 공간조성, 자연체험장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부여 등 ‘마을 맞춤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 2020년 도시공원일몰에 따른 서울시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땅 소유주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보상이 지연(예산 집행이 어려운 지역)되는 도시공원보다는 매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2020년 도시공원일몰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내용을 적절하게 홍보하고 인지시키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부족한 점들이 많음

- 향후 2020년 도시공원일몰 관련 서울 시민들의 혼란과 갈등 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역량이 필요해 보임
-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는 동남권역의 요지로서 도시생태숲 보존 및 가족캠핑장, 역사문화 체험장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대비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부권역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임

한강사업본부

□ 한강교량 승강기설치,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 노약자 및 지체장애인들의 시설접근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
 - 한강수변시설의 경우 현재도 설치시설의 부족보다는 접근성 불량, 비용과다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은 간과한채 신규시설 설치에만 급급한 듯 보임. 한강교량 승강기 설치사업은 신체거동 불편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나 일반도로에서 부터 승강기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임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사업 역시 접근성 제고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나 한강수변과 나들목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도보이동시 도움이 되겠지만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는 셔틀버스 또는 이색 이동수단 도입등을 통해 명물화하고 사업화를 하여 수변 접근에 편리를 제공하고 서울브랜드 제고에 일조함을 검토하기 바람

□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 신규시설 설치에 앞서 현 운영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활용개선방안 모색이 급선무
 - 2018년 현재 한강사업본부 관리구간 내 수변에는 10여개의 크고작은 수상레포츠 시설이 운영중이고(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자료 비공개),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등에서는 한국해양스포츠연맹 등이 운영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음에도 120억여원을 들여 새로운 수상레포츠 시설을 신축함이 타당한지 의문임
 - 지금까지 기 운영되고 있는 서울마리나 등의 접안시설의 경우도 선주들이 접안료 및 관리비 등의 부담으로 김포 등의 지역으로 소유선박을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 새로운 접안시설을 신축할 경우 기존 마리나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비싸질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신규수익 창출에 의문이 생김

- 또한, 카누 등 무동력 선박 보관시설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무동력선박의 수량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

□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 **여성 화장실 증설이 필요함**

- ‘둔치 및 화장실 청소’는 한강공원의 둔치 및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발생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하는 사업이며, 화장실 제작 설치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어린이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화장실 시설에 어린이용 변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한강공원 내 공중 화장실 관리 현황은 다음과 같음(2018년 8월 1일 기준))

소관 기관	소관 부서	시설명	총개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녀 공용	기타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광나루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24	11	11		2
		잠실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20	9	9		2
		잠원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8	8	8		2
		반포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6	7	7		2
		여의도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35	15	19		1
		양화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2	6	6		
		강서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10	4	4		2
		독섬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29	13	14	1	1
		이촌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33	14	14	1	4
		망원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26	11	11		4
		난지한강공원 내 공중화장실	27	12	13		2
	공원기획과	광나루수영장	4	2	2		
		잠실수영장	8	4	4		
		잠원수영장	6	3	3		
		여의도수영장	8	4	4		
		양화물놀이장	4	2	2		
		독섬수영장	8	4	4		
	공원사업과	난지캠핑장	4	2	2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청사	4	2	2		
	광나루 안내센터	광나루안내센터	5	3	2		
잠실안내센터	잠실안내센터	5	3	2			
독섬안내센터	독섬안내센터	3	1	1	1		
잠원안내센터	잠원안내센터	5	3	2			
반포안내센터	반포안내센터	2	1	1			

	이촌안내센터	이촌안내센터	3	2	1		
	여의도안내센터	여의도안내센터	4	2	2		
	여의도안내센터	샛강안내센터 청사	6	3	3		
	양화안내센터	양화안내센터	3	2	1		
	망원안내센터	망원안내센터	2	1	1		
	난지안내센터	난지안내센터	2	1	1		
	강서안내센터	강서안내센터	2	1	1		

- 한강공원 내 다중이용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때,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여성들이 불편을 경험하고,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에는 아이들의 화장실 이용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함
- 한강공원 내 화장실 설치 현황은 남성/여성 화장실 숫자는 비슷한 상황이지만, 화장실 이용의 남성/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 화장실 증설이 필요함

○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민 홍보 및 캠페인 필요**

- ‘한강공원 둔치 및 화장실 관리’ 관련 예산은 2018년 6,793백만 원에서 2019년 8,116백만 원으로 1,323백만 원 증액되었고, 예산의 증액 사유는 한강공원 이용자 및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액임. 서울시는 한강공원의 시민 방문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들의 한강공원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의 이런 노력과 투자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할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예산의 편성은 필요하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투자 등도 필요해 보임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 **한강공원 수영장 상시적인 수질 관리 및 정보공개 필요**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는 수영장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한강공원 수영장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됨

- 2018년 8월 9일 잠원야외수영장이 '수질검사 기준 위반에 따른 1차 경고 처분'을 받음. 서울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대장균군이 기준치(10ML 용량의 튜브 5개 중 2개 이하에서 대장균군 검출)를 초과하였고, 서울시는 수질관리기준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음
- 서울시는 잠원야외수영장 수질관리기준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잠원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는 비공개 문서로 취급하고 있음. 한강공원 수영장은 다중이용 시설이고,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영장의 수질 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정보도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 한강공원 매점 중 몇몇 편의점은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로 매주 주말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아닌 삭감 필요
 - 예산 증가를 원할 시 그 타당성을 위해 전 편의점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아르바이트 생의 최저임금 등 제출해서 검토 필요함. 금융특구 및 관광지역으로써의 면모 검토 필요

서울함 공원 운영

- 불분명한 운영목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2017년에 개관한 함상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 및 활성화 예산 편성이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음
 - 세부 프로그램 현황 : 전시설명(도슨트), 체험프로그램(전투식량, 군용건빵-유료), 배 만들기 체험(모형배-유료), 버스킹 → 체험 프로그램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특색이 없음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계량기 검침

- 송달 감액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예산 증액 필요
 - 미래의 서울의 모습이 스마트 시티인 만큼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동화 및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한전을 비롯하여 인력을 통한 검침은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추후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4차산업 혁명에 맞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기사자료> 첨부 <https://www.insight.co.kr/news/175837>

□ 아리수 품질 확인제

- 지속적인 수질 검사 수요가 있지만, 대상과 예산이 상당 부분 감소함
 - ‘아리수 품질 확인제’는 수질검사원을 채용하여 급수환경 개선가구 및 노후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무료 방문 수질검사 실시하는 사업임. 수질검사 2015년 293,118가구, 2016년 294,555가구, 2017년 295,332가구, 2018년 30만 가구를 목표로 하였음
 - ‘아리수 품질 확인제’는 서울시 시민에게는 아리수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2019년 수질검사인이 기존 160명에서 90명으로 축소되고, 수질검사 목표가구도 30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조정됨

III 기타 의견

□ 환경 관련 조례 요청

- 어린이집의 바닥재 관련 조례
 - 어린이집 바닥재를 실내용 바닥재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따라 최초 점검 후 교체시마다 점검 하도록 하여야 함
- 학교 증축 시 기계식 환기 시설 설치 관련 조례
 - 고농도 대기오염 시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가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하여 학교 시설물 증축 시에도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기계식 환기시설을 필수로 설치
 - ※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신축 시에만 기계식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존 학교에 단독 건물을 지어도 증축에 해당하여 기계식 환기시설이 필수가 아님
- 주택 라돈 농도 건축물대장 표기 관련 조례
 - 주택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수선 시 주택 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여 건축물대장에 표기
- 우수한 실내공기질 인증시설 측정치 공개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실내환경 관리시스템’ 웹페이지에 실내공기질 인증시설 중 우수시설에 한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치 결과를 실제 수치를 포함한 세부 내역까지 공개
- 태양광 패널 설치 관련 조례

-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 개보수 시 옥상 및 주차장 등 공동 공간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도록 장려하며 단독주택에 상응하는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휴공간을 생산적인 발전공간으로 적극 활용, 후서기 등의 세대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토록 함

○ 대기질 측정소 관련 조례

-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웹페이지에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은 6개의 도시배경 측정소의 측정 수치를 공개할 것. 또한 구별 측정소는 설립 목적이 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서울시 공원 전체, 서울시 도심 전체, 서울시 주거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되고 있지 않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이 또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웹페이지에 공개할 것

□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검토 필요

○ 서울시 공원이나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 확대 필요

- 생태계 복원 교육과 환경 보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한 상황임 (미래를 위한 교육보다는 단순 체험이나 일회성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 비중이 높음)
- 후세에게 환경과 인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평일 낮시간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여 노인 복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노인들을 자원봉사자로 채용하여 소규모 그룹의 해설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도 있음

5 경제 · 일자리 분야

I 총 평

- 2018년 예산안을 토대로 제출한 경제 일자리 분야의 의견서에 대해 담당 실국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회를 진행함.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 등 담당 실국에서 정책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예년에 없었던 일로 평가할 만 함
- 경제진흥본부 경제상공인 보호 등 공정경제 환경 조성에 예산 경제진흥본부 3,078억 중 17.3억으로 0.6% 편성으로 미미하여 증액이 필요함
 - 공정경제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 발굴과 시행, 효과 점검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해 보임(다만 임대차 상담, 서울형 프랜차이즈 조성은 근본적이거나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함)
 - 박원순 시장의 3선 공약 두번째가 ‘상생특별시’로 ‘불법, 불공정거래, 갑질 Zero 정착’을 제시하였음. 서울시민에게 전달한 약속과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가치 실현을 위해 2019년 예산 편성부터 대담하고 큰 보폭의 발상 전환이 필요함
- 창업허브 운영 이외에 [창업]이라는 명칭으로 나열되어 있는 사업 통폐합 필요
 - 창업허브(172억원), 글로벌창업센터, 서울창업디딤터, 디지털대장간, 서울창업카페, 서울창업포럼, 창업보육센터, 서울창업성장센터, 청년창업꿈터, 신촌박스퀘어 9개 사업 75.4억원이 편성됨
 - 창업 허브 운영의 통합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 9개 사업 전체가 계속 수행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성과 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유사 기능 통폐합 권고함
- 한국산업진흥원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성과보고서 역시 게시하지 않아서 편성/집행/평가/재편성이라는 기본 흐름 준수 여부가 파악되지 않음
- 2019 회계연도는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첫해라는 시의성에 맞게 경제일자리·행정 분야 정책과 예산 수립이 요구됨

- 민선 5~6기 서울시정은 복지재정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8회계연도의 경우 사회복지 예산은 9조6,597억원(34.5%)으로 확대되었으며, 산업경제(민생 경제와 일자리 등) 예산은 5,695억원(2.0%)이 편성되어 전년도(2017년 2.1%)에 비해 예산 비율이 축소되었음
 - 2019회계연도의 경우 서민경제의 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제 일자리 분야의 정책 비중은 늘리고, 예산은 확대 편성되어야 함
- 2013년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6기 시정을 펼친 결과 2012~2017년 사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 고용된 임시직에 대한 직접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2012년~2013년 직접고용 기간제 1,369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었음
 - 2015년~2017년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5,927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7,29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 2018년도의 경우 353,956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펼쳤음
- 한계가 보이는 사항
 - 2018년 예산 편성에 비취 볼 때, 경제진흥본부와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정책과 예산 편성은 전년도의 정책과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편성되었음
 -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이 요구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일자리분야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함

II

주요사업별 의견

경제진흥본부 소관 사업

서울형 R&D 지원 사업

- 서울형 R&D 지원 사업 예산은 2018년 220억이었으나 2019년 예산안에 236억 책정됨

-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공공테스트베드, 서울혁신챌린지 사업(예산 200억원)에 대한 평가 없이, 2019년도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2017년도에 의견 제출한 바와 같이 서울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자료 공개가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성과보고서, 예산 승인시 사업 계획/설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별도 보고서로 공개하여, 출연금 및 위탁 사업과 고유 사업에 대한 집행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경제 환경 조성(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에 경제진흥본부 3,288억 예산 중 134억, 4% 편성으로 예산액이 미미한 수준임**
 - 세부 내용인 상가 리모델링 지원, 임대차 상담, 서울형 프랜차이즈 조성은 경제민주화 도시라는 정책방향에 걸맞지 않은 사업 수립과 예산 편성으로 보임
 - 서울시장 주요 공약이 '상생특별시로 불법, 불공정거래, 갑질 Zero 정착'인만큼 약속 이행과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가치 실현을 위한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발굴, 시행과 효과 점검을 위해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권고함
 - 고금리 불법대부업체 점검 및 피해자 상담, 가맹점주 피해구제 등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5천만원으로 너무 적음
-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예산을 기존 8개소에 7개를 추가한 15개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25개 자치구 전체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Union City 서울의 경우 2022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2019년에 10개소 추가, 2020년에 7개 추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부터는 서울시 전 영역에서 활동 전개하여, 2021~2022년에 공약 사업 추진의 가치와 사회적 효과를 이루어야 함
-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은 500억으로, 인원 255명 대비 1인당 약 2억원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기능인 투자유치, 전략산업 육성, 창업과 DMC의 활성화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출연금대비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전략산업의 밸류에이션 상승치에 대한 정량적 평가, 창업과 DMC 활성화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함

□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은 도심제조업의 재도약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 패션봉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동대문),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서울 제품의 경쟁력 제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 산업 혁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됨
- 거점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의하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이 서울 유’ 브랜드가 확산되는 단계에서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의 추진은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 있음

□ 혁신성장 거점 기반 조성

- 혁신성장 거점 기반 조성은 흥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구축, 양재 R&D 혁신 허브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기업 육성, G밸리 경쟁력 강화, 온수산업단지 활성화,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 서울형 창업정책 모델 수립 시행, 테스트 베드 기반 조성(서울혁신챌린지 개최 등) 등임
- 서울의 주요 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거점 사업은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해야 함

□ 상생 공정 경제 실현

- 상생 공정 경제 실현은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정착이 사업의 주요 내용임
- 상생 공정 경제 분야 사업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6억원 → 10억원)” - 예산액이 4억원 증액되었음

-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의 경우, 장기안심상가 선정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액이 증액되었음

-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비’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유인책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장기안심상가의 경우에 상생협약을 지속되고 있는 지에 대한 피드백 및 감시를 통해 본 사업의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는 서울밤도깨비 야시장 운영, 푸드트럭 영업 공간 확대 활성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전 강화의 사업으로 구성됨
 - 현재 소기의 성과와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당사자와 주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함

□ “도시문제해결 (113억원 → 220억원)” - 큰 폭으로 예산안이 증액되었음

- 2017~2018년 창업허브와 서울디지털재단이 도입되는 시기에 설비 보수 및 신규 시설 구입으로 인하여 예산이 확대되었음
 - 2017년과 2018년 대비 서울디지털재단은 규모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창업허브는 같은 기간 140억원에서 100억으로 감소하였고 서울디지털재단은 80억에서 113억으로 증액되었음
 -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 중 창업 부분은 창업허브(SBA)의 업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업무 중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 관련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90489>)
 - 규모면에서 2017년과 2018년 대비 창업허브 시설 보다 서울디지털재단에 운영비가 대폭 상승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리고 2019년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220억이 추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상암동 서울애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 예산 실적에 나와 있지 않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은 정보기획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으며 일자리 창출 부분은 SBA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중복사업처럼 보여 예산 낭비로 지적 될 수 있음
 -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은 정보기획관이 경제진흥본부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경제진흥본부에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면 기존에 창업 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해온 SBA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서울디지털재단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려면 환경, 에너지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분야에 연구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며, 창업 인큐베이터와 전문 멘토단 및 투자 운영은 서울시 산하 SBA가 진행하는 부분과 동일하여 중복 예산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5억원→11억원)” - 예산액이 6억원 증액되었으며, 2018년 신규사업임

- “서울시 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의 경우, 핀테크랩 조성 완료에 따른 감액예정이었으나, 현실적인 핀테크 창업자 지원을 위한 핀테크랩 추가 조성을 실시하여, 예산액이 증액되었음

□ “서울창업허브 운영(162억원 → 171억원)” - 예산액이 9억원 증액되었음

- 서울창업허브,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서울창업디딤터, 디지털대장간, 서울창업카페, 서울창업포럼 등 창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이 센터에 대한 지원 혹은 포럼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창업허브는 서울시의 창업 시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타 센터의 사업 내역의 중복 여부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소지는 파악이 필요해 보임

□ 도시농업 관련 사업(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이 총 58억원에서 57억원으로 1억원 감액되었음

- 도시농업 관련 사업으로는 ‘도시농업활성화 추진(13억원 → 19억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45억원 → 38억원)’등이 있음
- 이 경우,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의 감액 금액이 삭감된 1억원을 제외하고, 상당수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짐. 이 경우에 각각 타당한 삭감과 증액의 이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함
- 즉,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의 경우 상당수 정책 고도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봐야 함. 또한,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사업의 경우 전년도 실적 대비 증액의 이유가 타당한 지 살펴봐야 할 것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업

- “서울형 뉴딜일자리(807억원 → 970억원)” - 큰 폭으로 예산안이 증액되었음
 - 2013년부터 시행된 청년 일자리 정책인 뉴딜일자리 정책은 시행 5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단순 시혜적 조치의 성격을 넘어 그간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매해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운영 규모와 예산의 크기를 반영한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사업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단순 취업률만이 아니라 취업유지율과 평균보수, 업종 등 취업의 질에 대한 성과지표를 반영해야 할 것임
 - 뉴딜일자리의 경우, 직무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는 디딤돌 사업으로, 상당수 임시직에 한정되어 있음
 - 뉴딜일자리의 수치 상승으로 양적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임. 다만, 2019년 예산안에서 큰 폭으로 예산안이 증액되므로, 일자리의 양적 제고 측면을 넘어서,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평가에 있어서도 정성적 지표를 통해 뉴딜일자리의 효과 평가가 필요함
 - 뉴딜일자리 정책사업의 성격에 대한 고민 필요함
 - 현장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게 도와준다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한 “양성과정” 사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치게 늘어남(ex. ~전문가양성과정)
 - 회사에서의 경험보다는 신규 발굴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체험적, 훈련적 성격이 강해짐(마치 대학 수업의 조별 활동 과제와 같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룹 활동 성격을 띠)
 - 해당 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 아울러 3~6개월 양성과정을 이수한다고 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선정 시 진출 대상 분야의 기업수요와 노동시장 형성 정도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근로 여건 및 복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대우가 존재함

- 사업 참여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곳은 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복무, 휴가, 급여 부분을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남(ex. 작년에는 별도 여름휴가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차휴가 활용으로 대체)
- 생활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계약직 근로자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상여금 등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차별적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생김(출입증, 단체복 등)

□ 청년일자리카페

○ 지나치게 일자리카페의 수적 확대에 집중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방안이 필요함

- 일자리카페 이용자 수 이외에 운영 장소의 여건, 프로그램 만족도, 강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평가·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 청년일자리카페는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서울 시내 9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44개소), 대학(18개소), 공공시설(28개소)로 운영주체가 나뉨
- 대학에 설치된 일자리카페 또한 프로그램 위주보다는 공간 제공 수준으로,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의 경우 이미 학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임. 즉 해당 대학 학생이 아닌 지역 청년들이 이용할 것을 대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동기요인이 부족함
- 각 지역구별로 설치된 일자리카페의 수 및 제공 프로그램의 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30억원 → 29억원)” - 소폭 감액되었음. 다만, 이 경우에 취업날개 서비스 사업과 중소기업 서비스 사업의 분리로 인한 감액과 시민참여예산과 중복 편성된 사업비의 삭감으로 인한 예산 절감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 청년채용과 관련해서는 뉴딜일자리에 비해 사업명에서부터 일자리의 질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있음

- 특히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사업은 성인지 대상 사업이므로, 선정기업들이 성평등 고용환경을 제대로 조성하고 있는지 사후 평가 여부를 파악해야 함

-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27억원 → 44억원)” - 현재 8개소를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의 확대에 의해, 2018년 예산액에 비하여 1.6배 증액되었음**
 - 노동복지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복합시설 조성 등 상당수 서울시 산하 센터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에 대한 지원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함. 더불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정보기획관 소관 사업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79억원 → 83억원)” - 예산액이 증액되었음**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의 경우 입주율에 따른 관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증액되었음
 -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율에 비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사업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46억원 → 54억원)” - 8억 증액되었음**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의 경우, 공약사업 추진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온예산분과) 의견이 반영되었음
 -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새로이 2014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16년 사물인터넷 실증지역 1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한 계속사업임. 올해 8억이 증액됨에 따라, 계획한 성과 목표 달성을 기대해 볼만함. 다만, 성과 목표의 도전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듦. 2016년에 성과목표 200% 달성, 2017년에 성과목표 160% 달성을 미뤄볼 때, 성과 목표의 수정이 필요함. 즉, 도전적인 성과 목표 계획을 통해,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의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8억원 → 26억원)” - 큰 폭(18억)으로 증액되었음**
 -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의 경우, 공약사업 추진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2018년 실시된 신규사업임
 -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경우 산출지표를 성과목표로 삼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2018년에 비해 2019년 3.25배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좀 더 구체적인 성과 목표 제시가 필요해보임

□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30억원)”,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34억원)”,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13억원)” - 2019년 신규사업**

○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시정 4개년 사업),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공약사업)과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시정 4개년 사업) 의 경우, 민선 7기의 미래특별시 주요 공약사업 혹은 시정 4개년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2019년 신규사업임

- 스마트시티 민·관 협력 사업의 경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기존의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등 5개 분야에 기존 사업이 있다면, 이와 조응할 수 있을 방안을 고려해볼만 함
-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기존 빅데이터 사업과의 차별성은 눈에 띈. 하지만, 기존의 “행정 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과의 재편과 통합을 통한 예산 확보인지 여부에 따라 예산 절감인지 예산 낭비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서베이(10억원→11억원)”, “사업체조사(22억원→30억원)”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증액되었음**

○ “서울서베이”와 “사업체조사”의 경우, 2019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증액되었음

- 다만, 두 사업의 경우, 조사 대상은 다르지만, 서베이라는 사업의 성격은 동일한 바, 서울서베이에 비해 사업체조사의 예산 증액 폭이 큰 이유에 대해 파악해 봐야함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12억원 → 27억원)”,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21억원, 신규)” - 큰 폭으로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임**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구축”의 경우, 2018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

- 두 사업의 경우, 각각 시민참여 사업에서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음. 시민참여 사업에서 지원하는 WiFi와 CCTV는 사업의 성격은 다소 다르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므로 그 의미가 있음. CCTV 관련 시민참여 예산이 2018년 7억원에서 18억원으로 2019년에 11억원이 증액되었고, WiFi 관련 시민참여 예산도 2018년 1억원에서 11억원으로 2019년에 10억원이 증액되었음. 다만, 두 사업을 포함하여 두 사업과 관련한 시민참여예산 모두 증액된 바, 확실한 필요에 의한 증액인지 파악해볼만 함

III 기타 의견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26억원 → 23억원)” - 민주노총, 한국노총 지원금 감액됨
 -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지원액을 수령해가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삭감됨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인 관련 법과 조례의 개정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복지 · 여성 분야

1 총 평

- 상반기 부서예산 편성 전 '19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실국본부에 제시한 온예산위원의 시민의견 내용을 관련 부서가 일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음
 - 부서별 정책 방향과 예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다보니 부서간 조율된 내용과 서울시 전체 기조의 변화는 확인이 어렵고, 단지 부서 정책 방향과 사업에서 분과위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의견이 반영된 일부 사업은 더 나은 정책 효과를 위해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서울시 민선 6기 사업 중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민선 7기에 지속 이행된 사항과 상반기 '19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실국본부에 제시한 시민의견 수용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 인권 5개년 계획의 일부 이행,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이 지속 이행 정책에 해당함. 장기 민원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장애인콜택시의 대기 시간을 조정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개별 사업비 중 서울시 민간위탁 또는 바우처 사업 등에 있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경우나 인건비 지급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예산에 반영함.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관련 부처 협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 등 노력을 하겠다는 부서의견이 있었던 점은 잘 된 점으로 이후에 부서의 지속적인 실행 노력이 요구됨
 - 복지시설 설립 등 건축예산과 수급자 혜택 예산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부서별 의견이 달랐음
 - 복지본부와 여성가족정책실의 부서간 입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시민건강국은 시민의견에 대해 사업별로 제안사항에 대해 설명과 의견, 반영여부 등을 밝혀 분과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제공하여서 분과 위원들이 온예산위원으로 참여한 의의를 더 해 주었음

□ **2019년도 복지, 여성 분야 예산은 총 6.8% 증가, 주된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난 것임**

○ 서울시는 의무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자체 사업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삭감,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 정책은 지출시기를 조정하거나 삭감 하였음.

- 서울시 전체 부서의 10억 이상 사업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는 서울시 전체 사업의 우선 순위별 예산 조정이라기 보다는 전체 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계수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음. 이에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예산서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서울시 상황에 맞게 기존 추진 중인 정책과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조정이 요구됨

□ **서울시 정책에 성인지를 포함한 인권을 고려하고 인구학적 관점을 적용하여 맞춤형 복지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정책 예산을 인구 구성별, 인권 문제별 등으로 볼 수 있게 하여서 부서 간 협력, 정책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책 생산·개선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전체 정책대상 인원수 대비 예산에 따른 정책대상 인원수를 밝히는 예산서가 필요함

○ 미래세대(영유아, 아동, 청소년)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정책 대상 기준을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가정 양립에서 성평등 중심의 일·생활 균형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생산 및 보완이 되도록 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서간 정책 협력이 필요함.

- 상기와 같은 사람 중심 예산서 작성과 이에 따른 통합적 정책 연계, 정책 보완은 시민에게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용이하게 하고 합리적 예산운용을 하는 데 필요하며, 현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사회적 가치 지향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사항임

○ 성과지표는 예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이 같은 수치를 적용함에 따라 필요정책의 확대, 개선,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개선이 필요함

- 사업 대상 변화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사업대상 기준 변경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목표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늘 같은 성과지표와 목표 수치를 적용하고 있음으로 개선이 필요함

- 생활 SOC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학교, 복지시설 등 재난약자 시설 포함)의 안전관리를 SOC 관련 부서에서 설계, 건축, 설립 후 안전진단과 관리까지 일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 있는 시설을 전문성을 갖춘 사람, 조직에 의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서울시 및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진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공공일자리의 처우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급여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서울시의 앞서가는 좋은 정책으로 지속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나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돌봄노동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여야 함. 서울시나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일자리도 생계를 책임질 수 있거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연구·노력하여 개선하여야 함
 - 특히, 공공이 만든 일자리가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서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노동자인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또한 중앙부처의 인건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하여서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II **주요사업별 의견**

복지본부 소관 사업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 주택바우처 포함)**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준 완화와 홍보로 대상 확대가 필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지속 불용되었던 과정이 있기에 그 이유를 확인하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비롯한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 정부는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시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급여수준, 선정대상, 신청절차 등 전반적으로 제도의 활용과 목적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예산 역시 작거나 불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앞두고(선정기준은 여전히 낮음)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개정과 선도적 기준 변화가 필요함. 다음은 현 주택바우처의 구체적인 정책 한계임(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협업 필요)
 - 1) 낮은 지원금 : 시흥시의 경우에도 지자체 주택바우처가 있음. 급여액은 1인가구 8만원. 서울시(1급지) 높은 임대료에 비해 지원되는 급여액수는 매우 낮은 수준
 - 2) 신청 거처의 제한 : 저소득층의 거처로 활용되는 고시원 및 쪽방 제외
 - 3) 특정바우처의 신청 절차의 제한 : 쪽방상담소를 통해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혹은 쪽방상담소가) 인정한 쪽방거주자였던 사람만을 인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임. 쪽방과 같은 형태이나 카운트 되지 않은 쪽방이 다수임. 인정범위와 신청 루트 매우 협소함
 - 4) 특정바우처의 신청자 제한 : 복지시설에서 민간보증부월세를 얻어서 나오는 대상 많지 않은 편임. 따라서 거처의 제한을 둔 것 역시 소극적인 제도 활용이라고 보여짐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받은 저소득층이 최소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임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기초 수급 외의 노인에게는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기초노령연금이지만 국가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노인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국가지원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함. 서울시가 복지부에 개선 협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여전히 국가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공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마을과 복지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지역사회 회사원이나 마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마을 자치에 참여할 수 있게 연구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많은 다른 관점의 복지와 개선점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 2018년 종합복지관 인원을 2명 증원한 것은 더 나은 시민 복지를 위해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음. 반면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을 생각하면 노인복지관의 인력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4-50대 중장년 인력과 청년 인력이 적절히 조화되어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관련 사업(어르신일자리, 보람일자리, 인생이모작 50+ 사업)

-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관련 사업은 짧은 사업 참여기간과 낮은 임금개선 필요. 어르신일자리, 보람일자리 등 인생이모작 50+ 사업도 생겨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어르신일자리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학교보안관, 교통질서 계도요원, 시니어 택배 등 단순 일자리로 전문성과 기존의 경력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님. 또한 급여는 생계비를 조달하기에는 턱도 없는 수준의 일자리로 생색내기 식의 복지보다는 이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일자리 개발과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른 생계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책정도 고려되어야 함

- 베이비부머를 위한 50+재단이 생겨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의 개인의 경력을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는 없고, 사회공헌으로서의 일만 있으며, 경력을 인정한 소위 전문가로서의 일자리는 제한적인 실정으로 이런 일자리를 전문가 일자리로 창출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는 스토리텔러나 어린이집 도우미 같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전부인 실정이다 보니 생계비 해결은 어려운 실정으로 재취업을 해서 생계비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로의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인생이모작 50+ 사업관련 “이모작”의 실질적 재취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재점검도 필요함

- 건강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중.장년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더불어 그 동안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욱 바람직함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공익활동인 노노케어는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나 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 모두 제한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노케어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 안전 문제로 서비스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 수요도 한계가 있음

○ **시장형 사업은 비교적 쉬운 공익활동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장형 사업의 인건비 지불방식은 시장형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나 1인당 월 15만원(년간 210만원) 보조금에 사업수익을 보태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공익형 월 27만원(30시간)보다 낮은 인건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이 시장경쟁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시장형이라는 이유로 인건비를 사업수익으로 만들도록 함에 따라 실제 참여자간 위화감이 큰 상황으로 서울시가 좀 더 보조하는 등 노인들에게 적절한 공적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정책과 등 장애인 전담부서 사업 협력 등 사업 방법 전환과 장애인이동에 필요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전철역 엘리베이터 등의 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 필요**

○ **운영실·국(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개선방안 등을 일부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지속 관리하여 장애인 이동을 편리하게 하여야 함**

※ 이 사항은 대기시간 일부 개선 전의 의견서 내용임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작은 실천이 아쉬움
- 탑승자는 1,2급 중증 장애인으로 작은 거리도 이동에 시간이 소요됨
- 탑승자가 요청한 주소까지 와서 도착안내를 하더라도 택시까지 이동하는 소요시간은 5분 이상 걸릴 수 있음. 때문에 도착 예정 10분전에 연락을 취하는 작은 배려만으로도 대기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실제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의 소리를 확인하면 비슷한 항의글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하여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콜택시에 장착된 노후된 네비게이션 개선이 시급함
- 실제 콜택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추가로 앱을 업데이트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개발사가 도산했기 때문이라고 함
- 문제는 최적의 길안내와 목적지를 빠르게 찾기 위한 중요한 장비관리를 유지보수할 수 없다면 이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은 아무리 양적 지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됨

□ **장애인 탈시설관련 정책: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정착금, 자립생활주택, 주거서비스**

- 장애인 탈시설관련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점검과 확대 필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차 탈시설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함. 그러나, 실제 시설거주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고 여전히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으로 예산이 구성되고 있음
-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 목표 인원에 맞는 예산수립이 되었는지 검토 필요.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와 탈시설정착금 확대 필요. 장애인거주시설은 탈시설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예, 자립생활, 대인관계, 사회적응, 체력 단련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필요시 프로그램 공간을 유치,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요구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차별 확대 계획 추진 내용확인 및 추가지원 등 확대 내용 검토와 지속 노력 필요.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였으나, 계획에 따른 추진이 미비하다는 것이 현장의 소리였음. 현재 활동지원기준 월30시간은 하루1시간으로 매우 적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탈시설 직후 지역사회 초기 정착 기간 동안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추가 활동지원이 필요함
-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24시간 대상자 확대 내용을 점검하고 생활시간 보장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지속 노력이 필요함.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시간 확대가 필요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방식과 확대에 대한 검토 및 필요사항 추진 필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왔으며, 보다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예산은 확대되어 왔으나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공모사업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지원활동에 제약을 만들고 있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당사자 주도, 장애인의 민주적 참여의 핵심은 장애인당사자의 고용이므로 상근인력의 과반수이상만 반드시 장애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및 지원이 필요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방식(운영비와 장애인 고용 등) 검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스페이스 살림 건립

-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중 SOC 담당부서와의 협력과 세부시설 내용의 점검 필요. 스페이스 살림 건립 타당성 조사는 경주, 포항지진이 있기 전 진행 되었기에 '18년 공사 내용의 안전 점검 및 '19년에도 주변과 자체 건축 현장,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진행하면서 공사가 이뤄져야 하기에 안전 관련 전문 부서 협조가 필요함
- 건립물이 대규모 시설로 장기간에 걸쳐 건립되기에 현실 적합성 등 세부 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여, 실제 사업 확정 이전에는 칸막이 공사 등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건립물은 여성가족복합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나 좀 더 성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보육교사, 보육시설의 환경·급식)

- 초저출산 고령시대에 출산장려와 보육환경 개선이 중요함. 보육기관은 정작 부모가 믿고 보낼 수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함
- 여전히 아이를 믿고 맡길 시설은 많지 않은 것 같은 현실로 매년 보육시설을 확충하지만, 아이 출산율은 떨어지고, 부모가 원하는 보육시설은 찾기 어려움
- 양질의 보육을 위하여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연령, 성별, 지적수준) 맞춤형교육이 필요함. 또 다른 이유로는 고된 보육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체계도 개선이 필요함. 음성적으로 대가성이 농후한 선물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이와 상관있다 사료됨. 식단도 좋은 재료로 여러 아이들의 식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질병, 특이한 체질 등을 고려하여 보다 질 좋은 식단이 제공되어야 함
- 보육시설 환경도 공간도 협소하고, 자연 공간도 부족하여 개선 방안이 필요함

우리동네 보육반장

-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의 현장 적정성 검토 필요
- 1-3개동별 1명이 배치한다고 하는데 동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25개구가 동일하게 운영비가 지급되는 경우는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의 질적 차이가 우려됨

아이돌보미 사업의 노동법 위반 점검 등 서울시 자체 개선 노력 필요

○ **아이돌보미 사업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부처(여가부, 복지부)협의 지속과 서울시 자체 개선 노력 필요**

- 대체적으로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으나 기존 아이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은 너무도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중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 보육임. 기존 기관의 지원으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은 물론 수행하고 있던 야간활동시간의 축소, 교통비의 비 지급 등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법의 위반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어 서울시 자체만이라도 개선이 요구됨
 - 1) 06:00-22:00가 주간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의 타당성 검토(여가부 협의사항)
 - 2) 주5일 근무 시 토, 일 유급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 검토(여가부 협의사항)
 - 3) 활동 개시 전 80시간과 년 20시간 보수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비지원이 되지않고 있음(여가부 협의사항)
 - 4) 활동 시 교통비가 처음에는 지급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도서, 산간벽지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함
- 아이돌보미 사업 사례처럼 작지만 개인의 인권으로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시정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줄여져야 될 것임

서울형 초, 중등학생 대상 수당지급제도 도입 제안

○ **현재 미래세대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가 아동수당, 양육수당제도가 도입, 더 나아가 고학년 이상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수당지급제도 형식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

- 인구학적 변화, 사회 변화로 미래세대 전반의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 도입을 제안함

보호필요여성의 복지 향상(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여성 관련 시설, 상담소)

- 외부의 눈길을 피해 운영되는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시설, 상담소들이 소규모 시설로 시설 종사자들이 전과 다른 시대상황과 욕구에 맞춰 늘어나는 업무와 운영 프로그램에 적절한 인원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 업무 개선,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서울시 지원 사업과 국가사업인 경우에 차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우개선 노력이 요구됨

-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함. 담당부서는 1대1 언어발달교육서비스, 기타 대학생 학습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체감되고 있으므로 정책 평가와 예산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의 비율이 중요하기 보다는 인구 구성별(영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 남성, 노인 등) 단위, 기준 등으로 복지 정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 평생교육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야 함

- 평생교육국의 예산 상당 부분이 청소년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어르신의 평생교육의 경우 복지본부의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하나의 부서에서 운영할 필요

- 복지본부의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평생교육국에서 운영중인 '서울자유시민대학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과 유사하므로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을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사내용 공유와 운영노하우를 상호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직업적인 것 이외의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 서울시 기관에서 청장년층을 평생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그러한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의 확대와 적극적 홍보 필요. 특히 대학생, 직장인들이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강좌가 많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취업준비나 경제활동에 여념인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가 대학연계 야간강좌들을 살펴보면 주제가 다양하나 이미 모집 완료된 강좌들도 있음

청소년시설(청소년 정책과)

- 서울시에 다양한 목적을 가진 청소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각 지역에 고루 분포했는지, 각 지역의 청소년시설들이 서울시로부터 비교적 균형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지 등과 이들 시설이 분포한 지역구의 재정을 고려하여 지역편차를 줄이고 균형있게 지원되어야 할 것임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

-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사업 마무리 점검과 학교에 필요한 다른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친환경학교급식 위탁 사업 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

- 친환경학교급식 위탁 사업 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의 연차별 확대
 - ‘친환경학교급식 위탁 사업’과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사업’은 대상이 각각 신청학교, 14개구의 학교들로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겨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므로 모든 지역구의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함
 - 또한 위 두 개의 사업이 점차 전체 지역구로 확대될 예정이라면 연차별 계획의 수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고등학교 우수 식자재 지원

- 고등학교 우수 식자재 지원 방식을 변경, 고교 의무급식 조기 진행 필요
 - 서울시는 현재 고등학교에 우수 식자재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고교 급식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고교 의무급식을 조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 급식(학생식당) 시설 예산 역시 화장실 사업처럼 추진되었으면 함

- '18년 서울시 조례상 전출금(교육경비보조) 60억원(교육청 전출) 및 교육청 62억원(별도편성)을 매칭하여 초중고 123개교를 대상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 중, 19년도에도 요청 시 협의 예정이라고 함
-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연차별 완료시점이 있는 중장기재정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시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 안전을 포함한 기능 보강 공사의 예산 소관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시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등사업의 경우 평생교육보다는 도시·안전과 관련된 본부나 실국으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유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 학교, 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해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의 추진은 평생교육보다는 도시·안전과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예산을 더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초·중·고교 입학·졸업 시 지역사회(서울시, 구청 포함) 학업지원금 도입

- 출산 70일된 여성의 경우 자치구 지원 출산지원금이 무척 유용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초중고 입학이나 졸업의 경우도 자치구나 서울시 단위의 학업지원금 형태의 지원으로 마을,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같이 키우는 정책을 제안함

서울시 고교 의무교육 조기 진행 제안

- 현재 국가 상황은 미래세대 교육을 사회가 책임져야 할 시기로 고교 의무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먼저 정책화 할 것을 제안함
- 서울시가 일시에 정책화하기 어렵다면 의무교육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여 정책화할 것을 제안함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역할인 공공보건의료 구현 지속 노력과 확인 필요

- 2018년 공공보건의료 구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로 역량지원을 수행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연 실재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설립 취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18.9.3. 현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연구동향, 건강칼럼 등 공공의료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건강격차' 코너는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안내되고 있는 것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또한 공공의료재단을 포함하여 예산집행 감시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재단들에 대한 운영실태, 당초 계획대비 실적, 개선사항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기준 완화 필요

- 산후조리도우미 파견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사업대상을 중위소득 80% 이상 출산가정 이상으로 확대, 보편적 서비스로 전체 산모,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점검 및 확대

- 2018년 대비 2019년 사업비를 동결하였음. 사업 대상 인원을 동결한다 하더라도 물가인상을 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출생부터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 유지,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산후조리도우미 사업과 연계되는 정책으로 국민생산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지켜주는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함

보건소, 보건지소 관련 정책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과 유사 사업에 대한 운영 내용 검토 필요**

-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인프라 표준화’사업 안에 ‘어르신 만성질환 안심돌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운영’사업을 포함하거나 두 사업에 대한 대상을 다르게 하여 운영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소 운영개선(열린보건소) 운영 실태 점검 및 홍보 필요**

- 자료상 열린보건소 운영시간 토요일 09:00~13:00, 평일 08:00~21:00, 일과후로 안내됨
- 그러나 실제로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고, 홈페이지 상 운영시간이 2,4주 토요일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있으나, 9시 이전이나 일과 후에는 거의 없음
- 또한 공통사업 내용인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자치구 특화사업’ 등의 안내도 보건소 홈페이지에 대한 별로 없음
- 관련하여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의 실태 파악과 정책 검토, 홍보 등이 필요함

○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 접근권이 좋도록 하는 보건지소 신규 설치 예산이 없음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 평가 및 기존 사업 포함하여 지역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 필요한 지역에 정책이 늦춰져 시민의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예산의 전액삭감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약사업이나 전액 삭감됨에 따라 전년도 정책 평가 내용과 삭감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III

기타 의견

저소득층 초등학생 방과후 수강권 지원 방식 변경

-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강권은 무의미하므로 스포츠바우처나 문화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간 상호교차 예산지원방안을 검토바람(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문화예술과 등)

학교 공사에 따른 방과후 학교 운영 방식 제안

- 석면공사, 급식실 공사, 내·외 인테리어 공사 등 위험도에 따라 학교에서는 방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직장에 가야 하는 부모들은 아동들을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서울영어마을 영어캠프, 과학관 체험,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치되거나 사교육학원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바람(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문화예술과 등)

학교시설을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함

- 2018년 하반기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방안연구 학술용역 중(18.7~12) 사항이라고 함. 맞춤형 조사용역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용역 결과의 확인이 요구되며 초등뿐만 아니라 초등 고학년과 중등이상의 케어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사회 연계형, 초, 중학생 통합형 방과후 수업 추진

- 인근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연합하여 양질의 통합형 방과후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방과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문화예술과 등)

시민교육을 위한 도서관 내 토론 가능 공간 마련

- 구립 및 시립 도서관이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으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교육이 필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협업을 필요로 하는 발표 사전모임이 가능한 토론방 운영

□ **청소년공부방 또는 청소년지역아동센터 등 확대 필요**

- 공동육아방에서 더 나아가 초등 고학년 이상 중학생 이하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체험하며 쉬기도 하면서 안정된 먹거리를 제공받는 공간들의 확대 필요 (평생교육국,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등)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연계 자원봉사 수행 활성화**

-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개인 단위 혹은 가족단위 지속적인 자원봉사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씩 일정기간 수행했을 경우에 마을단위 사회발전 기여도를 감안하여 그 개인이나 가구단위 지원(현금 전환 포인트나 마을밝힘이 상 등)이 가능해지면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

□ **부서의 담당 사업을 변경하여 전문성 강화, 효율적 운영을 제안함**

- 생활 SOC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학교, 복지시설 등 재난약자 시설 포함) 안전관리를 일관성있고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SOC 관련 부서에서 일괄 담당하며 시 소속 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018.9.30. 민선7기 조직개편안 보도자료 중 ‘용산건물 붕괴, 상도유치원 붕괴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주택건축국 내)를 신설’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 복지본부의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평생교육국에서 운영중인 ‘서울자유시민대학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과 유사하므로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을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유사내용 공유와 운영노하우를 상호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국의 학교 급식 관련 사업을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시민건강국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복지현장 등은 업무량 대비 인원 부족으로 시간외 근로가 과다한 경우가 많음으로 서울시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연결하여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초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화 하는 것을 제안함
 - 공공일자리 정책 중 적정서비스를 위해 시간외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의 복지시설에 실태조사를 하여 인력을 충원함에 따라 전문성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복지시설, 특히 소규모시설장인 경우에 상근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외부 업무로 실제 근무자들의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므로 상근 경우 내부 근무일수를 채우도록 하거나 외부 업무가 많은 경우 비상근 기준을 만들어 운영비에서 근무자를 1명 더 추가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무자의 적정한 근무로 서비스 제공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 부모들이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실내 시설을 찾을 때는 최상의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각종 실내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되는지가 기준이고, 환경부의 '권고' 혹은 '유지' 기준에 겨우 미치는 수준의 장소는 굳이 선택하여 찾으려고 하지 않음
- 따라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미세먼지 대피 목적의 장소를 만들 때는 실내 공기질이 최상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되도록 환기와 미세먼지 해결, 에너지 절약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미세먼지 필터를 갖춘 전열교환기 등)을 리모델링 과정에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민들의 항의로 뒤늦게 설치할 경우 리모델링 시 설치하는 비용보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공사가 불가능하여 버려진 공간이 될 수 있음
- 필요할 경우 한국실내환경학회 등 실내 환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회의 시설 자문 및 실제 시민들의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한 뒤 그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좋은 실내 공기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다양한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측정기 상시 설치, 내부 청소 및 헤파필터 교체 예산 확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시설 운영 중에도 관리자와 사용 학부모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피드백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할 것

참 고

2018년 온예산위원 현황

○ 온예산분과 인원 : 총 72명

- 도시안전·교통·주택 15명, 문화·관광체육 15명, 환경·공원 14명, 경제·일자리 15명, 복지·여성 13명

연번	소분과명	소속 자치구명	성명	성별	나이	비고
1	도시안전·교통주택	영등포구	강태만	남	59	
2	도시안전·교통주택	노원구	김기영	남	42	
3	도시안전·교통주택	동작구	김도은	여	53	
4	도시안전·교통주택	동대문구	김재룡	남	25	
5	도시안전·교통주택	강남구	김정숙	여	58	
6	도시안전·교통주택	성북구	김환중	남	36	
7	도시안전·교통주택	중구	문호근	남	57	
8	도시안전·교통주택	광진구	박보우	여	31	
9	도시안전·교통주택	송파구	박선영	여	37	
10	도시안전·교통주택	구로구	박재상	남	39	
11	도시안전·교통주택	성동구	봉윤덕	남	66	
12	도시안전·교통주택	용산구	서동규	남	28	
13	도시안전·교통주택	강동구	최기연	여	61	
14	도시안전·교통주택	도봉구	황수현	여	26	
15	도시안전·교통주택	서초구	황지성	남	34	
16	문화·관광체육	금천구	고영찬	남	26	
17	문화·관광체육	동작구	고유영	여	30	
18	문화·관광체육	서대문구	김경애	여	66	
19	문화·관광체육	관악구	김명미	여	55	
20	문화·관광체육	광진구	김보민	여	39	
21	문화·관광체육	서초구	김상현	남	29	
22	문화·관광체육	종량구	김승은	여	63	
23	문화·관광체육	노원구	김양중	남	57	
24	문화·관광체육	강동구	김태형	남	36	
25	문화·관광체육	강북구	박성철	남	46	
26	문화·관광체육	구로구	박양수	남	68	
27	문화·관광체육	강남구	박형우	남	27	
28	문화·관광체육	도봉구	이성혁	남	62	
29	문화·관광체육	마포구	인향봉	여	51	
30	문화·관광체육	은평구	한정희	여	49	
31	환경·공원	관악구	김봉선	여	28	
32	환경·공원	강서구	김성숙	여	64	
33	환경·공원	광진구	김해인	여	19	

연번	소분과명	소속 자치구명	성명	성별	나이	비고
34	환경.공원	종로구	나진명	남	61	
35	환경.공원	영등포구	남관희	남	70	
36	환경.공원	양천구	문성돈	남	66	
37	환경.공원	동작구	박지선	여	43	
38	환경.공원	도봉구	서일석	남	62	
39	환경.공원	구로구	이대한	남	31	
40	환경.공원	강남구	임애리	여	41	
41	환경.공원	강북구	임춘실	여	56	
42	환경.공원	서대문구	정다운	여	36	
43	환경.공원	송파구	조민아	여	49	
44	환경.공원	마포구	최제욱	남	51	
45	경제일자리.행정	서대문구	김영재	남	36	
46	경제일자리.행정	동대문구	김일애	여	35	
47	경제일자리.행정	금천구	김주희	여	30	
48	경제일자리.행정	광진구	문헌규	남	42	
49	경제일자리.행정	송파구	서진원	남	25	
50	경제일자리.행정	영등포구	유병준	남	51	
51	경제일자리.행정	관악구	유승우	남	47	
52	경제일자리.행정	서초구	윤창영	남	46	
53	경제일자리.행정	마포구	이보현	여	29	
54	경제일자리.행정	성북구	이주현	여	26	
55	경제일자리.행정	양천구	정성욱	남	50	
56	경제일자리.행정	성동구	주정규	남	64	
57	경제일자리.행정	구로구	지건용	남	48	
58	경제일자리.행정	은평구	지현이	여	56	
59	경제일자리.행정	도봉구	한정광	남	45	
60	복지.여성	동작구	강혜원	여	23	
61	복지.여성	용산구	고희선	여	54	
62	복지.여성	성동구	권기정	남	63	
63	복지.여성	노원구	김가은	여	32	
64	복지.여성	양천구	김은수	여	52	
65	복지.여성	송파구	김치엽	남	29	
66	복지.여성	금천구	박지영	여	46	
67	복지.여성	강서구	박현숙	여	55	
68	복지.여성	강동구	이명화	여	52	
69	복지.여성	중구	이미선	여	60	
70	복지.여성	중랑구	이미숙	여	53	
71	복지.여성	강남구	이미애	여	58	
72	복지.여성	영등포구	이제민	남	42	